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박치경



막바지 팽별이 낡았다라도 입추(8일), 말뚝(13일) 다 지났으니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유난히 잦았던 물난리에도 무더위가 맹위를 떨쳤지만 시간 앞에서는 하릴없는 게 계절이다.

다가오는 가을, 정치권은 한여름 못지 않게 달궈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 임시국회는 당면 현안을 다룰 예정이지만 내년 4월 18대 총선과 12월의 대선을 앞두고 물 풀기 성격도 띠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회는 격랑의 정국으로 들어가는 초입인 셈이다.

주문은 화해와 통합

정국이 본격적인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기 전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3년 반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취임 초기부터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으로 상징되던 측근정치에 민심이 반의 빌미가 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외치던 촛불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경찰 바리케이드를 본 딴 '명박산성'으로 국민과는 '불통'의 벽을 쌓았다. 여기에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한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계층 간, 정파 간 극심한 갈등을 불러왔다.

거꾸로 간 3년 반, 남은 1년 반

물론, 경제회복과 G20 정상회의 개최, 원전의 중동 수출 등으로 국격을 높인 업적도 적지 않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에다 연평도 포격은 한 순간에 남북을 긴장상태로 몰아 넣었다.

사실 우리 국민의 바람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남북 간 민족화해, 국부의 효율적인 운용을 토대로 한 사회통합, 국격의 향상 같은 일반적인 가치를 실현해달라는 것이다.

돌아켜보면 이명박 정부의 지난 3년 반은 국민의 바람을 상당부분 거스른 형국

이 되고 말았다. 아직도 남북관계는 최악이다. 서민들은 생활고에 지쳐 무감각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다만, 근래 위기감을 느낀 여당이 반값 등록금을 포함한 각종 서민정책에 눈을 돌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회미하지만 수해물자 구호로 남북관계도 풀어질 기미가 보인다. 지난 3년 반 동안 '거꾸로' 온 길을 되돌아가려고 애쓰고 있다고나 할까?

그렇다고 민주당과 야권에 대한 점수가 후한 것만은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있다는 점에서 선거공학적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도 산적인 과제 여전

이 즈음에서 민주당은 야권통합을 전제로 국민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정치총행'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내년 4월 총선에서 조국 서울대 교수(강남)-'시골의사' 박경철씨(대구)-'IT 선구자' 안철수(부산) 박사로 이어지는 '서울-동부벨트' 진용을 갖추 수만 있다면 전통 우세지역과 맞물려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인 의사가 관건이지만 선진국에서는 전문직들이 정계에 진출해 시민에게 입법으로 봉사하는 케이스도 많다.

이이 손학규-문재인을 포함한 범야권의 레이스를 통해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면 '여계인 2002'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주어진 시간은 똑같다. 한나라당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남북화해와 친서민, 상생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여론이 바뀔 여지는 남아있다. 민주당과 범야권 역시 실현 가능한 대안과 새 인물을 내놓는다면 재집권의 확률은 높아진다.

지난 3년 반의 학습을 통해 정치권이 가야 할 방향은 명백해졌다. 이제 남은 1년 반이 문제다.

〈서해부장〉 unipark@kwangju.co.kr

시설

외국인 시대, 이제 그들을 포용할 때다

광주·전남지역에 외국인 인구가 올해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섰다. 급년 1월을 기준으로 광주·전남 거주 외국인은 각각 1만8824명, 3만5077명 등 5만 390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근로자가 1만6823명으로 전체의 31.2%를 차지하고 있고 국제결혼가정 자녀 1만 3167명(24.4%), 국제결혼 이주자 9717명(18.0%), 유학생 5738명(10.6%) 등의 순이다.

이제 길거리나 농촌에서 외국인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래밍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보 접근은 열악하고 외국인 전용센터 등 문화화인프라는 아예 없는 실정이다. 외국인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줄이고 정책적 배려가 없는 한 그들의 불신과 반발감도 커지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하루 빨리 이러한 장벽들을 풀어내는 노력이다. 주류 사회와 융합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과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외국인 증가가 우리 사회의 역동성으로 발전할지, 갈등과 반목으로 전락할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아산나눔재단 기부문화 확산 계기 돼야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을 제외한 범(汎) 현대(家) 그룹은 16일 5000억 원 규모의 사회복지재단 '아산나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고 정주영 회장 서거 10 주기를 맞아 그의 '나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 설립 취지라고 한다.

아산나눔재단은 앞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청년창업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아직도 '나눔'에 인식한 국내 재계의 여건을 감안할 때 범 현대가 그룹의 결정은 기업 특히 대기업의 기부문화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반드시 그래야 한다.

외국에서 재벌과 부유층의 재산 사회 환원과 기부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탈·편법을 쓰지 않고 정당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사회적 존경을 받는 것만은 사회에 보답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정반대다. 실제로 대기업에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감과 차별 대우 역시 여전하다. 언어와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초래되는 오해와 갈등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상 근로자에 있어 노골적인 차별과 임금체불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외국인 아내에 대한 가정 폭력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지역사회에 융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보 접근은 열악하고 외국인 전용센터 등 문화화인프라는 아예 없는 실정이다. 외국인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줄이고 정책적 배려가 없는 한 그들의 불신과 반발감도 커지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하루 빨리 이러한 장벽들을 풀어내는 노력이다. 주류 사회와 융합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과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외국인 증가가 우리 사회의 역동성으로 발전할지, 갈등과 반목으로 전락할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결코 굵지 않다. 정경유착과 문어발식 경영, 여기에 편법까지 동원한 부(富)의 대물림 등 '탐욕 경영'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공정을 심화시킨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탐욕 경영으로는 지속발전을 할 수 없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 하지 않고는 존립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예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 부의부 빈익빈사상생반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의 모델을 제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 범 현대가의 자발적 출연은 액수뿐 아니라 재벌 였나 일가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향후 다른 재벌들의 사회공헌을 늘리는 일대 진기가 돼야 한다. 아산나눔재단 설립을 계기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대석

얼마 전 모일간지에 실린 '동자(童子) F1'이란 칼럼을 읽은 적이 있다. 칼럼은 영암에서 열리는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동자(어린이)에 비유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몸값이 100억원이 넘고, 시속 350km까지 속력을 낼 수 있으며, 1년에 20개국을 돌며 경기를 하고, 매 경기마다 세계에서 6억 명 이상이 시청을 하며, 연간 4백만 명 이상의 관객을 이끌고 다니는 F1이, 지난해 10월 한국의 전남에서 태어났지만, 돈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설움을 받고, 일단 공부에 잘하면 등록금이 없어 학교를 그만

'童子 F1'의 미래를 위하여

둘 문명에 처해 있어 안타깝다'는 내용이었다. 정말 F1이 처한 상황을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도 F1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잠잠하던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것은 지난달 말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F1은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성공하게 시작한 면이 있다. 유치하기 전에 도의 재정형편과 경기운영의 수익구조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지적된 생각을 함께 한다.

그러나 이제 올해 대회가 겨우 6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이나 전남도민이라든금년도 경기를 성공리에 치를 수 있도록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

일부 단체에선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그만둔다고 해서 예산이 절약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금년도 개최

권리는 규약상 지급보증이 되어 있어 경기를 포기할 경우 고스란히 손해로 연결된다. 따라서 지금은 F1을 치르는 도민으로서 서로가 형편에 따라 F1티켓을 한 장이라도 사고, 이무게 참여를 권장하는 것이 재정적자를 극복하고 F1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다.

F1은 지난해 10월에 첫 번째 경기를 치루면서 충분히 성공가능성을 보여줬다. 대회기간 중 목포시내에는 개항 이래 최다의 유람인들이 거리를 메웠고, 숙박업소가 부족해 인근 시군과 광주시내의 숙박업소까지도 특수를 누렸다. 경기 당일에는 빗속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을 가득 메운 인파로 교통대란을 일으키는 등 국내 여론 경기에서도 보기 힘든 성황을 이루었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송광운

이산화탄소가 상품이 돼서 거래되면서 돈이 되고 있다.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이산화탄소는 환경제약의 주범이지만 역설적으로 경제적 가치도 엄청나다. 돈이 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탄소배출권'과 '탄소포인트'다.

'탄소배출권'은 1997년 교토의정서의 기후변화협약에서 탄생했다. 미국 등 38개국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 수준으로 줄이도록 하는 협약을 맺고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정한 뒤 이를 국가별로 할당했다.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는 국가나 기업은

탄소절감 선택 아닌 필수다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곳으로부터 배출권을 사야한다. 세계 탄소시장 규모는 2006년 300억 달러 수준에서 2010년에는 5배가 넘는 1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탄소포인트'는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펀드를 만든 뒤 이 투자금을 다시 온실가스 줄이기 사업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들이 국가간에 이뤄지는 거래라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탄소캐시백'과 '탄소포인트제'다.

'탄소캐시백'은 탄소캐시백 카드를 보유한 사람이 에너지절약형 저탄소제품을 구매할 경우 인센티브로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적립된 포인트를 대중교통이나 제품 구매 등에 사용한다.

'탄소포인트제'는 국민 개개인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범국민적 기후변화대응

활동이다. 광주시는 2008년부터 '탄소은행제'를 도입 기후변화에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탄소은행제는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면 포인트로 환산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탄소포인트제와 어울만 다를 뿐 비슷하다.

포인트는 최근 2년간 에너지 사용량을 평균한 양보다 현재 사용한 양이 적을 경우 포인트를 지급해서 현금을 탄소은행카드에 입금시켜 준다. 탄소은행제는 오는 10월 광주에서 100개국이 참가하는 '2011 도시환경경약 광주정상회의'에서 각국 대표에게 소개될 정도로 온실가스 절감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북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은행제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6만여세대가 가입을 했고 6만6000세대가 목표다. 북구는 광주시 탄소은행제 추진 평가에

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시상금으로 탄소은행가입 우수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등 공동시설에 전력이 적게 소모되는 LED전등으로 교체해 주기도 했다.

탄소절감정책을 전향적으로 시행하면서 환경도 지키고 인센티브까지 챙기는 효과까지 얻었다. 지난달에는 주민들에게 전기·도시가스·수도를 아껴 공공요금도 절약하면서 현금혜택까지 받는 탄소은행제 가입을 독려하는 구청장 서한문을 보내기도 했다.

탄소를 줄이는 것은 지구를 살리는 것이다. 탄소절감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방의 '물 폭탄' 피해는 한반도의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면서 나타난 기상이변의 후유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0여년 간 기온이 1.7도나 상승했다. 이는 세계 평균 상승치 0.74도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미 제주도 해안가와 남해안 일부는 아열대 기후대에 속할 만큼 심각하다. 더 이상 탄소를 절감하는 노력을 강 건너 불 보듯 할 때가 아니다. 이제라도 탄소은행제 가입에 적극 나서자.

〈광주시 북구청장〉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피부와 직접 닿는 제품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만 돼있는 화장품의 이름과 성분

내용을 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한글 표기를 부탁한다. ▲박미진·목포시 서산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로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無等鼓

청초 말엽의 기인 이종은 자신이 저술한 '후흑학(厚黑學)'이라는 책에서 "중국의 역사상 영웅호걸로 불리는 자들이 난세를 평정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두터운 뺨(면후·面厚)과 시커먼 속마음(심흑·心黑)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설교하고 있다.

이종은 중국의 역대 인물 중 춘추시대에 활약한 월왕 구천(句踐)을 후흑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고 있다. 낮에는 열굴 가득 웃음을 띠고 오랑 부차(夫差)를 섬기다가도, 밤이면 뿔나루와 지푸라기에 누워 쓰디쓴 울개를 씹는 와신상담(臥薪嘗膽)을 통해 결국 부차를 죽임으로써 풀어나간 천하의 패권을 차지한 인물이다. 구천은 회계싸움에서 패한 뒤 스스로 오랑 부차의 신하가 되었으며 그의 처는 부차의 첩이 됐다. 후흑학에 따르면, 이것이 구천이 구사한 '면후'다. 훗날 구천은 와신상담 끝에 오나라를 깨뜨렸다. 부차는 사람을 보내 통곡하며, 자신은 신하가 되고 부인은 첩이 되겠다고 빌었지만 구천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이 '심흑'이다. 구천의 이 같은 행보는 세계 최빈국이었던 중국이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 아래서 실력을 길러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G2(Group of 2)로 떠오른 과정과 비슷하다.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힘을 길러온 중국이 최근 항공모함을 건조해 세계 최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은 '갈날의 빛을 갈집 속에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라는 도광양회(韬光養晦)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요즘 국내의 정세를 보면, 중국은 동북공정 및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내세우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고 일본은 재난을 지원해준 은혜는 도의시한 인물이다. 구천은 회계싸움에서 패한 뒤 스스로 오랑 부차의 신하가 되었으며 그의 처는 부차의 첩이 됐다. 후흑학에 따르면, 이것이 구천이 구사한 '면후'다. 훗날 구천은 와신상담 끝에 오나라를 깨뜨렸다. 부차는 사람을 보내 통곡하며, 자신은 신하가 되고 부인은 첩이 되겠다고 빌었지만 구천은

면후심흑(面厚心黑)



채 독도도발로 실리를 챙기려는 한국이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궁색한 형편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도 대외나 명분만을 내세워 성난 얼굴로 상대를 몰아세우기보다는 '면후심흑'의 묘리를 활용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홍행기 정책부처장redplane@kwangju.co.kr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元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인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